

하 남 시 의 회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정병용 의원)

의 안 번 호	2710
------------	------

발의연월일 : 2023. 7. 17.

발 의 자 : 정병용, 강성삼,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최훈중, 오승철,
오지연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연결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남하남나들목(분기점)에서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으로 연결되는 길이 27.1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서,

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남시의 대표적 명산인 검단산에 횡으로 터널을 뚫어 산이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되고 하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파괴될 것이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겨 24시간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다. 하남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하남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라. 이에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의 즉각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한다.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하남시장

4. 결의안(건의안) : 붙임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사업(이하 ‘중부연결 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 하산곡동(중부고속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국도47호선)에 이르는 총 27.1km의 구간(하남시 4km, 남양주시 : 23.1km)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검단지맥 터널 통과로 인한 지형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

이에 하남시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올 해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 전면 재검토 및 하남 구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검단산 터널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시행자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밝히며 사업 시행을 구체화했다.

하남시의 랜드마크인 검단산은 ‘생태도시 하남’의 근간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보호종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우리에게만 반드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검단산에 터널을 뚫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하남시민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검단산을 관통해서 나오는 도로는 천현동 새능마을로 이어져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공동체가 소실 될 것이고 주민들은 평화로운 삶을 통째로 빼앗길 것이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건립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본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주요 목적은 남양주시 등 인근 지역 수도권 연결망 부족에 대한 해소이다.

우리 의회는 민간기업의 이익 창출과 인근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하남시민이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토교통부와 시행자에 묻고 싶다.

지난해부터 하남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32만 하남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하남시의회는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하남시민이 반대하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태도시 하남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태환경 보전을 보장하라.

하나, 하남시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2023년 7월 18일

하 남 시 의 회